



우수선원 지속적 확보를 위한 마스터플랜 마련

해양수산부 선원직업에 대한 새로운 비전 제시

오 장관, 정례브리핑에서 선원정책방향 밝혀



해양수산부는 우수한 선원인력의 지속적인 확보와 복지증진 등 선원정책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오거돈 해양수산부 장관은 8월17일 오전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구체적인 선원정책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오 장관은 “선원정책의 효과가 가장 확실한 산업기능요원 제도의 유지와 활용을 통해 해운 및 수산계 고등학교, 대학교 졸업자에 대한 안정적인 승선을 지원하는 등 산업기능요원제도를 통해 안정적인 승선인력을 확보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오 장관은 또 “주요물자 수송선박에 대해 일정 수준의 한국선원 승선을 의무화하고, 이에 따른 추가비용을 보전해 주는 국가필수선박제도를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겠다”며, 이를 위해 내년에 우선 30척을 필수선박으로 지정하여 10억원의 추가비용을 보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이와함께 국제선박의 외국선원 고용인원도 척당 6명에서 8명으로 확대하여 한국선원의 고용안정과 인력난 해소를 동시에 추구해 나갈 계획이다.

해양수산부가 우수한 선원인력의 지속적인 확보

를 위하여 선원양성 및 선원복지제도 등에 대한 포괄적이고 획기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한 것은 1980년대까지만 해도 우리 선원들이 외국선박에 취업하여 높은 외화획득으로 국가경제 성장에 커다란 기여를 하여 왔으나, 최근 국민소득 증대에 따른 임금상승과 격리된 근무여건 등을 이유로 승선을 기피하는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이날 발표된 개선방안의 주요골자를 보면, 산업기능요원제도의 유지와 효율적인 활용으로 해운 및 수산계 고등학교, 대학교 졸업자의 안정적인 승선을 지원함과 동시에 산업현장에서 필요한 인력 양성을 위하여 해사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실습중심(2년 이론 + 1년 실습)으로 개편키로 했다.

또한, 전시 등 비상시에 국민경제에 긴요한 물자(원유, LNG, 곡물 등)의 안정적인 수송을 위하여 필수선박에는 한국인선원 승선을 의무화하고, 이에 따른 선사의 선원비를 정부가 지원하는 “국가필수국제선박제도”를 도입, 내년부터 시행하는 한편, 한국상선대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외국인선원 고용인원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이밖에도 해양수산부는 선원들의 근무여건 개선 및 직업 정체성 확립을 위하여 어선에 승선하는 선원에 대하여도 유급휴가제도를 실시하고, 장기적으로는 선원양성·고용·직업전환 등 평생에 걸쳐 지원할 수 있는 ‘선원경력개발프로그램’을 시행할 계획이다.

한편, 우리나라의 취업선원은 1987년 11만 5,000명에 이르렀으나 이후 계속 감소하여 2004년 말에는 4만명에 불과한 실정이다.